

다산포럼



남 경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반 히데유키(伴英幸) 선생의 부고에 부쳐

고 치밀한 자료 분석에 기반해 탈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일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면 그의 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작년 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이 임박했을 때 필자는 관련 토론회와 학술회의를 조직하게 되었다. 반 선생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어 메일을 보냈다. 모르는 이가 무작정 보낸 메일에 답을 줄까 싶었지만, 그는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를 소개하는 회신을 보냈다. 짧은 메일의 행간에서도 그의 성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얼마 후 필자는 원자력자료정보실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 반 선생에게 다시 연락했고, 그렇게 작년 11월 나카노구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그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각종 자료로 가득 찬 사무실에서 그는 열심히 기억을 더듬어가며 필자의 이런저런 질문에 꼼꼼히 답해주었다. '관련 연구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니 잘 부탁한다'고 하자 '사무실을 가득 메운 자료들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기쁘겠다'고 대답하셨던 게 기억난다. 도쿄 출장 때마다 반 선생을 만나 볼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말았다.

반 선생 자신이 '원발불명암'이라는 희생 불가의 희귀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3월 말이었다고 한다. 이후 두 달 boyunca 투병 생활 끝에 탈원전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원전 없는 사회'를 위한 25년의 싸움에서 그가 먼저 물러났다. 남은 사람들의 분투를 비는 짧은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반 선생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예단하지 않았다. 오

직 치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확인된 사실, 관련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사실에 기초해 발언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랬기에 그가 관여한 원자력자료정보실의 성명이나 의견, 제안 등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만큼 일본 사회에서도 목직함의 의미를 지녔다. 그의 굵직한 소식을 NHK와 아사히신문 등 거의 모든 주류 미디어가 다룬 것은 일본 사회가 그의 존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많은 사람이 반 선생의 도움을 원했을 것이다. 특히 기사나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할 이후 그가 직면했을 일상적 과로 상태가 죽음을 재촉했을 것이다. 우리의 첫 만남도 그렇다. 난데없이 찾아온 외국의 연구자에게 잠깐의 휴식 시간마저 내어주신 건 아닐까,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를 탈원전 운동으로 이끈 다카기 선생도 대장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반 선생은 '시민과학자'의 삶을 살았던 스승의 메시지를 '시민이 어떻게 과학을 전유할 것인가'라는 과제로 받아들였다. 후쿠시마 사고 후 그는 원전과 관련한 '새로운 공론의 장'을 구축하는 일에 주력했다. 하지만 오염수 해양 방출의 결정 과정은 '전문과학자'와 '시민과학자'가 함께 하는 공론장의 형성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아직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얼마나 강렬했던 것일까. 완화의료병동에서 체류된 2분 46초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반 선생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NGO 칼럼

교제폭력,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해자들은 가해자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하는 한편 연인으로서 좋은 감정을 공유하고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폭력을 인지하기도, 끊어내기 어려워한다. 또 가해자의 회유, 협박 등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보복과 두려움으로 은폐하기도 한다.

최근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몇 년 전까지도 교제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 이에 광주여성전화는 2021년 8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비혼 여성 쉼터 '비상'을 개소했다. 당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반면, 스톱·교제폭력 피해자는 상담 외에 의료, 법률, 쉼터 입소 등의 지원이 불가능했다. 2021년부터 스톱킹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긴급주거지원 등 교제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안타까운 점은 교제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수사기관이 교제폭력의 맥락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단순 쌍방폭행으로 처리하거나,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질조사를 요청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친밀한 관계의 특징인 피해자의 신상을 잘 알고 있어서 손쉽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를 만나야 하는 상

황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다. 더욱이 폭행죄로 취급되어 반의사불복죄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교제폭력이 쌍방폭력 사안이었다고 실제를 명확히 밝혀 가해자의 폭력 위험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말과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보복·협박·강요·위력 행사 등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합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지지했다고 한다. 이러한 지시가 실제 교제폭력 사건처리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까? 아직 현장에서는 멀게만 느껴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첫째,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폭력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므로 교제폭력 범죄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제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특성을 제대로 고려한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아울러 교제폭력에 대해 스톱킹, 성폭력 등을 포함하여 확장적으로 바라보고 반복, 재발되는 교제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강 경희 광주여성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장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교제폭력 사건으로 법적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의 폭력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과연 현실에서는 어떠한가? 광주여성전화 상담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폭력과 스톱킹 피해를 중첩적으로 경험했으며, 주로 가해자와 동거 중에 피해가 발생했거나 전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거지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가해자 처벌에 적극적이기보다는 쉼터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제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엔 다정한 모습으로 애정을 드러낸 가해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집착,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다. 피

社說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분위기 조성을

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해묵은 주장과 반대 의견이 다시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를 포함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속출하면서 노인들의 운전권을 줄이거나 금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노년층일지라도 신체적·지적 능력이 중·장년층보다 우월할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통제는 노인들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교통수단이 대도시에 비해 적은 탓에 이동이 불편한 농어촌에서 노인들의 운전권을 금지할 경우, 노년층의 일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의 고령운전자 수는 2020년 8만 7625명에서 2023년 11만 1286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전남 또한 2020년 15만 4906명에서 2023년 19만 5588명으로 늘

었다. 고령운전자 증가는 곧바로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총 1만 52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고령운전자 사고는 3462건(22.6%)으로 다섯 건 중 한 건 꼴이었다.

고령자 중에서도 운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은 물론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선진국들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70세가 되면 면허를 만료하고 이후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한다. 미국의 일부 주는 고령자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야간시간 운행 금지, 거주지 인근에서 서만 운전 등의 제약을 두고 있다. 우리도 이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통이나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고령운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입소 문턱부터 낮춰야

광주시가 유기동물을 일시적으로 맡아 돌보는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센터)를 개설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센터에 맡겨진 유기동물 가운데 한 달 평균 1~2마리만이 보호소에 입소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광주시는 북구 본촌동에 있는 광주동물보호소로 유기동물이 풀리면서 포화상태가 지속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센터를 도입했다. 지난해 북구와 광산구에 신고돼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유실동물은 각각 701마리와 830마리에 달한 점을 고려해 북구와 광산구의 동물병원에 센터를 위탁 운영한 것인데, 이곳에 입소한 동물들은 10일간 머물다가 보호소로 옮겨지게 된다.

마리, 광산구 센터에는 5개월 동안 11마리가 각각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애초 위탁센터를 동물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수용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데에 원인이 있다. 마리당 지원 예산이 20만 원(센터당 한해 최대 100마리)에 불과, 실질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다친 동물들은 입소가 안 되며, 전염병에 걸린 유기동물도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줄이고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란 기대와 달리 입양이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좋은 유기동물만 센터로 간다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지적이다.

하지만 운영을 시작한 지 수개월 동안 센터에 입소하는 유기동물 수가 현저히 적어 동물보호소 포화상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구(5월부터)와 광산구(3월부터)에 신설된 센터에 현재까지 입소한 유기동물은 총 13마리로 북구의 센터는 3개월 동안 2

만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동물복지가 지자체의 책무가 된 지 오래다. 광주시는 유기동물의 센터 입소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는 않은지, 센터 운영을 동물병원에만 한정하는 지금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요즘 짬뽕 더위와 장대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더위도 너무 더운 날씨와 느닷없이 굵은 빗방이 쏟아지는 날씨가 공존한다. 기존 관념으로는 장마철인지만 집을 나설 때 창문을 살짝 열어둬도 쾌청을지, 우산을 챙겨야 할지 고민하기도 한다. 요사이 연일 고온다습한 날씨를 겪다 보면 누구나 한반도 기온과 강수량 등 기후 여건이 정진적으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기후변화도 문제다.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 기후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21세기 전반기에는 남부지역과 해안지역, 대도시 일부에서 '아열대 기후형'이 나타나지만, 21세기 후반기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름철 대표적 작물인 고랭지 배추의 경우 2050년께에 고온에 의한 생육저하와 병해충 피해 증가로 현재의 7%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30년 기온과 강수량 등 평년(1991~2020년) 값과 올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6월 평균기온은 섭씨 22.7도(최고기온 27.9도, 최저기온 18.7도)였는데 올해 6월 평균기온은 23.8도(평균 최고기온 29.3, 평균최저기온 19.4)였다. 6월 강수량 역시 30년 동안 152.6mm가 내렸는데 올해의 경우 149.1mm가 내렸다. 불과 사흘간(22, 29, 30일) 142.1mm가 몰아쳐 내린 '야행성 폭우'라는 점이 눈에 띈다. 오락가락하는 장맛비보다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쏟아 붓는 집중호우가 더 무섭다.

기상청이 8일 새벽 경북 안동시와 영양군 일대 읍면동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202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침수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제도로,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 일 때 발송된다. 올 여름은 폭우로 인한 총복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2023년 7월)와 같은 재해를 겪지 않아야 한다. 짧은 시간에 쏟아 붓는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맞춰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기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양극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농촌에서는 사용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프라를 갖추고 인구가 많은 도시나 읍지역은 상품권의 발행 형태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을 선호하는 데다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도 높다.

도시에서는 상품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반면 농촌은 주 연령층인 고령세대가 디지털 구매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고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상품권 구매도 여유가 있는 편이다. 결국 농촌 주민들은 상품권 구매에 있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것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지역 상품권의 양극화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건 상품권의 사용처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즉, 가맹점 수를 비교하자면 더욱 명확해진다. 도시 지역은 언제 어디서든 큰 클럽들 없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지만, 농촌 지역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가 현저히 적어 사용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 지침을 바꿔 법인 전체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업체는 사용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이 영향으로 그렇지 않아도 사용처가 적은 농촌지역은 농협의 하나로마트, 자재판매장, 주유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면서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농협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저해하는 개정안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과연 지역사랑 상품권이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잘 스며들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제도적인 개선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양극화는 단순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시행된 사용처 등록 기준인 법인별 연 매출액 30억원은 소상공인도 많고 사용자도 많은 도시 지역의 경우 충분히 적합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도 적고 사용자도 고령이며 교통편도 여의치 않은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한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보다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게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 날을 손잡아 기대해 본다.



위 희환 (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남남도연합회 수석부회장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경제 성장률, 저출산 문제, 극심한 사회 갈등 등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양극화'이다. 양극화는 서로 다른 계층이나 집단이 점점 더 차이를 나타내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득, 교육, 일자리, 주거, 건강, 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계층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또 다른 분야에서 양극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바로 '지역사랑 상품권'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역경제와 이웃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사용자의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이 무색하게도 상품권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도시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漢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3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체육부 220-0697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